

# 여당·의사협 '4대 의료정책' 재논의 급물살

## 의협, 오늘 범투위 열고 협상안 논의...“정부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 했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1일 의료계와 만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범의료계 4대아 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열고 국회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협 관계자는 2일 “한 의장이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와 유사한 의미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80석의 거대 여당이라 의지가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의료계 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3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장은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 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철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한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특위나 협의회를 꾸려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원점 재검토’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 의장은 의료계와의 협상과 관련해 이날엔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의 ‘보통력’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한 의장과의 면담 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여당과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정부와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국회와 풀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재,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전향적·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대전협은 이날 면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정책의 큰 추축이자 전문가인 의사와 함께 논의해 달라”라며 “젊은 의사들은 언제든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 與 공수처법 개정 “더는 못 기다려”

## 이낙연 협치 시험대...“개정안 발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 출범일을 이미 넘긴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개최식 전까지도 미래통합당이 자당류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자 결국 갈을 빼든 것이다.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원칙 있는 협치’는 첫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발의를 이제 검토한다”며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처리는 모르겠지만 발의할 법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야당 류 후보추천위원

을 내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원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류 추천위원을 냈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4명’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원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8월 말까지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통합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 靑 신임 부대변인에 임세은 “여성·청년 입장 대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세은 현 청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임 부대변인은 청년소통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층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서 여성과 청년층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대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관 전임 부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승진 발탁됐다.



간이음압격리병실 살피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전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용 간이음압격리병실을 살펴보고 있다.

# 미래통합 새당명 ‘국민의힘’ 확정

## 기본소득 도입 포함된 새 정강·정책도 함께 의결

2일 미래통합당의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17일 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7개월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명 변경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오후에 최종 의결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78명의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부의된 안건으로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포함해 새 정강·정책인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10대 약속’ 개정이 있었다.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이로써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을 위한 당대 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변경 등록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하여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1일 통합당 상임전국위는 새 당명 최종 후보군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힘’을 원안대로 추진했다. 2일 전국위 의결까지 거쳐 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새로 거듭나게 됐다.

/뉴스

# “반한감정 자국민 호도 그만” 이재명, 일본 극우에 일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반한감정 부추기며 자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일본 극우 세력에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적 신뢰회복은 침략과 인권침해 역사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게이지아신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한국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언동과 행동력이 지지받고 있다”면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고 울리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반대했다”며 이 지사가 과격한 반일인사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본 보수우익 입장에서 많이 거슬리는 인물일 것이고, 팩트 자체만 보면 틀린 것은 없다”면서도 “왜 하필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러 4년 전의 글을 끄집어내 반일인사로 규정할 것인지 그 숨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적대감을 만들어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전통적 전략”이라 분석했다.

# 文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

## “의료현장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으로 생긴 진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렇게 적은 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욕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어 달라”면서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곳곳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상의 문제보다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며 간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 가중”이라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중단과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뉴스

# 靑 “전광훈, 최소 미안한 시늉하는 게 도리”

## “방역 협력은 고사하고 루머 퍼뜨리며 훼방 놓나”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 후에도 정부를 향해 비난한 데 대해 자심 비판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방역 조치 협력은 고사하고 당차도 않은 루머를 퍼뜨리면서 훼방을 놓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랑한 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울고 있거나, 한숨 쉬고 있다”고 했다.

또 “그간 묵묵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기독교계 목사를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광훈 씨

는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미안한 시늉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다시 환기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담의 기간을 문대통령에게 줄테니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며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는 거짓 평화통일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뒤 제가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전화로 불법선거운동’ 양향자 캠프 관계자 4명 송치

## 광주 서구의원 1명 포함...양 의원 개입 확인 안 돼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측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로 당원·유권자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서구의회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의원 등 4명은 올해 2월부터 3월 초까지 민주당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A 의원 등은 지난 3월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민주당 경선 당시 전화 여론조사를 한달 가량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지 호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가에선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의원이 경선

당시 양 의원 측 경선 캠프 내 산하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선거위 고발 당시 양 의원 측은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선 투표 독려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건비 지급·사무공간 임대 등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A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했으나, 양 의원의 지시 또는 개입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5조 등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